

## 제28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정기회의 참석 결과

### □ 개요

- (일시/장소) '23.11.11(토)~11.20(월) 16:00~01: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47개 체약당사자, 4개 협력자, 9개 정부간기구, 26개 NGO 등 약 600명

\*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심수빈 사무관(수석대표) 외 11명

### □ 주요내용

#### 1. 이행위원회

- 상어, 새치 권고 이행평가(체크시트)
  - 여전히 많은 CPC들이 '해당 어종을 목표로 하지 않음', '해당 어종이 분포하는 장소에서 미조업' 등과 같이 유효하지 않은 답변을 계속, 권고 이행에 관한 국내조치 미설명, 생존방류·사망폐기량 미보고
- 개도국 이행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가 파견(이행 미션)
  - ICCAT 권고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CPC에게 사무국 이행관과 외부전문가가 방문하여 이행역량 제고를 위한 자문 등 임무 수행
  - 세네갈, 상토메프린시페, 세네갈이 이행 미션 파견을 요청하였고, '24년에는 상토메프린시페에 파견하기로 함
- EU 타란테로\* 사건(Operation Tarantelo) 후속 논의
  - \* 몰타 축양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참다랑어 불법 밀반입·반출 사건. 불법어업 외에 자금세탁, 조직범죄 등과 연계되어 있는 본 사건은 현재 스페인 법원에서 심리 중으로 불법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타란테로 사건으로 인한 불법어업 규모가 확인되면 초과어획량에 대한 반납(페이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
- EU는 동 사건에 지중해 다른 CPC 소속 조업선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CPC들에 의한 미보고 어획량도 확인되어야 함을 언급

#### ○ 중국어선 불법 혐의에 관한 NGO 정보

- EJF(환경정의재단)는 중국 어선의 상어 지느러미 피닝 혐의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본 회의에는 불참함
- 중국은 EJF 제출 정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 해당 어선은 불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정보를 제출한 NGO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함
- 중국, 일본, 과테말라, 세네갈은 NGO에 의한 정보는 유효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이행위 과정에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음을 강조함
- 미국과 EU는 NGO에 의해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관련 CPC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보 제출 자체를 막아서는 안됨을 강조함
- 의장은 이행위가 사실확인 또는 사법 기능을 하지 않으며, NGO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행위 작업에 유용함을 언급하고, 정보 제출을 위해 NGO에게 옵서버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정보 제출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할 것임을 언급

## 2. 패널1

#### ○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

- 일본 · 남아공 · 브라질과 EU는 금년 회기간 회의에 제출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중미와 서아프리카는 논의 수월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였음

- 회기간 회의를 통해 CPC들은 상호 입장을 알고 있었고 본회의에서 이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 비공식 협의를 통한 진전이 시도되었음
  -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남아공·브라질 제안서를 토대로 하여, 가장 핵심 요소인 할당 수치는 공란으로 한 절충 제안서가 마련되어 EU와 서아프리카 CPC들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고,
  - 과테말라에 따르면, 상기 언급된 CPC들이 합의한 문서를 중미는 나중에서야 공유받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즉석에서 의견을 줄 것이 요청되었다고 함
  - 절충 제안서가 회의에 제출되자,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현장에 없었던 중미 그룹은 비공식 협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력히 항의를 표명함
  - 일본 등 제안국들은 과정에 대해 사과를 표하고 동 제안서를 논의의 토대를 위한 문서로 제출한 것일뿐, 가장 핵심인 할당 수치는 제안되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진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다시 이루어진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은 CPC들이 각자의 입장만을 생각해서는 TAC를 준수하는 할당안 마련이 불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각 CPC가 희망하는 할당 수치를 종합한 문서를 마련하였음
- \* CPC들이 희망하는 수치를 모두 합산하면 제안된 TAC(73,000톤)를 3000톤 초과
- 일부 CPC들은 이 문서를 제안서로 오해하고 문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표명하였고,
  - 일본은 문서의 의도를 오해해서는 안됨을 재차 설명하고, 문서의 의도를 이해한 CPC들은 일본이 비난을 받아서는 안됨을 강조함
  - 일본은 절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의장이 해야 할 일인데, 의장이 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일본이 시도했으나 CPC들의 오해와 비난을

- 받았고 앞으로 이러한 작업을 떠맡는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언급함
- 과테말라는 패널1 논의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내년에 총회 의장(Mr. Ernesto Penas Lado)이 패널1 의장직을 임시로 수행하는 것을 제안함
- 서아프리카 CPC들은 가나가 계속 수행하는 것을 지지하였고, 벨리즈는 미국의 Ms. Melanie King을 의장으로 추천하였으나 미국은 추천에는 감사하나 의장직 수행 의사가 없음을 표명함
- 가나는 새로운 의장 후보 약력을 소개하였고, 반대하는 CPC가 없어 가나가 계속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함
- 현행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함

#### ○ 눈다랑어 초과어획 반납계획

- 세네갈과 브라질의 과거 연도 눈다랑어 초과어획에 대한 반납계획을 결정함. 초과어획에 대한 반납은 발생 연도 2년 후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22-01 10항), 초과어획량 과다로 분할 반납을 허용함

| 구분  | 초과어획량<br>(초과어획 연도) | 반납계획                                 |
|-----|--------------------|--------------------------------------|
| 세네갈 | 1,377.77톤 (2020년)  | 2023-2032년에<br>매년 137.77톤            |
| 브라질 | 1,587.34톤 (2022년)  | 2024년 355.34톤<br>2025-2028년에 매년 308톤 |

#### ○ 열대다랑어 관리전략평가(MSE)

- 미국은 열대다랑어 MSE 수행을 위해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초기 관리목표\* 개발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함

\* 자원상태, 안전성, 산출량, 안정성

- 일본은 복수어종 MSE의 경우, 어종별 회복력이 상이함으로 인해 동일한 관리목표 수치를 설정하기 어려울 것임을 언급
- 구체적인 관리목표 수치를 논의할 시간 부족으로 결의안 미채택

### ○ 눈다랑어 최소크기 제안서

- 미국은 눈다랑어 치어 보호를 위해 56cm 미만 눈다랑어 어획량을 TAC의 10% 내 그리고 최대 X톤으로 제한하는 제안서를 제출함
- EU, 과테말라, 남아공은 조치 이행이 어려움을 언급하고 과거 최소크기 규정이 있었으나 이행 어려움으로 폐지되었음을 상기시킴
- 중국과 일본은 이행 감시를 위한 항구검색 강화와 같은 접근이 필요할 것임을 언급
- 미국은 FAD 금어기 확대에 대한 강한 저항이 본 제안서 제출의 배경임을 설명하며 본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FAD 금어기 논의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음을 언급(제안서 미채택)

## 3. 패널2

### ○ 참다랑어 할당

- '22년 연례회의에서 시간 부족으로 할당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할당에 불만족한 CPC들이 할당 논의 시작을 위한 문서를 제출
- 한국은 현재 CPC별 할당량 편차가 심함을 제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할당비율에 따라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TAC 증감시 변동률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안을 제시
- 영국 역시 현재 7개의 CPC가 전체 TAC의 약 95%를 할당받고 있음에 반해, 10개의 CPC는 5%를 할당받고 있는 점을 제기하고, 보다 공평한 할당을 위한 논의를 익년 3월 패널2 회의에서 시작하여 다음 TAC 주기('26~'28년)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
- EU는 ① 할당 논의의 토대는 할당에 관해서 현재 효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권고인 14-04가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② 작년 TAC 증가율이

13%일 때, EU는 10% 증가하였지만, 60% 증가한 CPC도 있는 등 이미 차등적인 증가를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③ 과거 자원회복 시기에 이루어진 EU의 희생이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

- 의장은 익년 3월 패널2 회의(3.5~8)에서 할당 논의를 정식 의제로 하여 2일 간 논의하기로 제안하였고 의장 제안에 합의함

#### ○ 참다랑어 관리절차 비상상황 절차 채택

- 작년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관리절차 내 요소 중 비상상황 절차를 작년 채택하지 못하여 금년 회의에서 채택함
- (판단요소) ① 자원상태 및/또는 어업지표가 관리전략평가 맥락상 예상 범위 밖에 있을 경우 ② 관리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가 미가용 또는 불충분 또는 부적절할 경우 ③ 동부 또는 서부 해역 총어획량이 각 해역 TAC를 초과할 경우
- 비상상황 발생 판단이 반드시 과학위의 TAC 감소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고, 과학위가 지표 재검토 및 의견 변경을 고려하도록 함

#### ○ 북방 날개다랑어 TAC 및 쿼터 변경

- 관리절차 주기(3년) 도래로 과학위 조언에 따라 TAC를 증가(37,801톤 → 47,251톤)시키고 CPC 쿼터도 비례적으로 증가

| CPC   | '24~'26년 기간 중 쿼터 |
|-------|------------------|
| EU    | 35,815.9         |
| 대만    | 5,521.1          |
| 미국    | 889.4            |
| 영국    | 752.8            |
| 베네수엘라 | 421.9            |

- 기타 CPC들은 연간 어획량을 각 302톤으로 제한
- 일본은 2024, 2025, 2026년에 일본의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량의 4.5% 이내로 제한

## 4. 패널4

### ○ 북방 청새리상어 권고 개정

- EU\*와 영국\*\*이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TAC와 기타 CPC들의 어획량 제한을 위한 기준연도를 논의한 후 절충된 제안서로 합의함

\* EU안 : TAC 32,689톤, 기타 CPC 기준연도 2019-2021년

\* 영국안 : TAC 25,000톤, 기타 CPC 기준연도 2011-2015년

- (합의안) TAC 30,000톤\*, 기타 CPC들은 최근 10년 평균어획량 미만 수준으로 장려

\* 2033년에 Kobe 매트릭스 녹색영역 분포 가능성 67%

### ○ 남방 청새리상어 권고 개정

- EU 제안서를 토대로 논의되어 채택됨

- (합의안) ① TAC 감축 : 28,923톤(19-08) → 27,711톤 ② 주요 조업 CPC(EU, 브라질, 나미비아, 일본, 대만) 어획한도 수립 ③ 기타 CPC들은 현재 수준으로 어획량 유지를 장려하고 구속적인 어획한도 수립에 관한 규칙\* 마련

\* 1) 연안개도CPC가 특정 연도에 어획량 1,000톤을 초과할 경우, 동년 어획량으로 수립

2) 비연안개도CPC가 특정 연도에 어획량 750톤을 초과할 경우, 750톤으로 수립

### ○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제안서

- 미국은 23개 공동후원국과 함께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제안서를 제출(15년째)

- 일본은 작년과 같이 반대\*하였고 미국은 내년에 다시 제출할 것임을 언급

\* 반대 이유 : WCPFC에서 일본이 본 조치에 합의한 것은 WCPFC에서 공해승선검색 조치가 채택된 후 일본 선박의 불이행이 적발되었기 때문으로, ICCAT에서도 먼저 공해승선검색 조치가 채택되어야 함

## ○ 북방황새치 관리절차

- 본 회의에서 TAC 결정을 위한 새로운 관리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 3차례의 관리전략평가(MSE) 회의가 개최되었음
- 마지막 MSE 회의(10.10~11) 이후 관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 예비 관리절차들에 대한 과학위 작업반의 최종 작업이 예상보다 늦게, 그리고 다소 예상 밖의 결과가 도출되어 관리자들이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음
- 과학위 의장은 작업을 천천히 하였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심증이 강하고, 작업 결과가 과학위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지만 과학위가 작업반에 재량을 주었음을 언급하였음
- CPC들은 올해 관리절차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고 현행 조치 1년 연장과 '24년 MSE 회의 일정을 채택함

## ○ 고래류 포획에 관한 결의(한국)

- 한국은 ICCAT 선망 어업 중 고래류가 목격될 경우 의도적인 투망을 금지하고 고래류가 포획되었을 경우 안전하게 방류 및 사건을 보고하도록 장려하는 제안서를 제출(공동후원: 영국, 모로코)하여 합의됨
- 일본은 과학위 조언 부재를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비구속적인 결의이므로 채택에 반대하지 않음을 표명하고 향후 구속적인 권고로 제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위 조언이 필요함을 언급

## ○ 고래상어 포획에 관한 권고(EU)

- EU는 고래상어 보유 금지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미 다른 기구들에서는 채택되었고 사전예방적 차원임을 강조함
- 일본은 구속력 있는 조치는 과학위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과학위 조언이 없음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중국도 이에 동의함



- 영국은 제안서를 지지하며 과학위가 업무부담이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 조언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함
- 본 조치 필요성에 대해 '24년 과학위에서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25.1.1부터 발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안서 채택됨

#### ○ 가오리 포획에 관한 권고(영국)

- 영국은 사전예방적 차원으로 가오리 보유 금지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
- 일본은 과학위 조언 부재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CITES에서 가오리가 등재될 때에도 과학 조언 부재를 이유로 반대하였음을 언급함
- 본 조치 필요성에 대해 '24년 과학위에서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25.1.1부터 발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안서 채택됨

### 5. 상설작업반(감시·감독·통제 조치 논의 작업반)

#### ○ 전자감시시스템(EMS) 최소기준 수립에 관한 권고 제정

- 열대다랑어, 새치류, 청상아리 권고에서 EM 최소기준 마련이 요청되어 수립된 EMS 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EU가 제안서 제출
- 일본은 너무 자세하게 규정된 내용의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개도국들도 이행 어려움과 역량구축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
- EU는 제안된 내용은 현재 업계에서 하고 있는 EM 관행임을 언급하고, 권고 자체로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사람 오피서버 대신 EM 사용을 선택할 때 적용되는 최소기준)

#### ○ IUU 선박 목록 수립에 관한 권고(21-13) 개정

- 중국은 최근 IUU 혐의를 받은 자국 선박에 대해 기국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CPC들이 NGO가 제공한 정보만을 토대로 IUU로 단정한 사례는 매우 부적절했음을 이유로 제안서\* 제출

- \* IUU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관한 정보를 받은 후, 기국은 60일 내 동 선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완료 전까지 동 선박을 IUU로 단정 불가
- 미국과 EU는 기국 조사가 완료되기 전, 항구국과 연안국에게도 IUU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언급
- 중국은 적용대상을 '공해에서 IUU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 규정하여 EEZ를 제외하고 제안서 채택됨

#### ○ 국제공동검색제도 수립에 관한 권고 미채택

- 작년 연례회의, 금년 IMM 회의에서 논의된 제안서\*가 IMM 문서로 제출

\* ICCAT 해역 내 공해상에서 체약당사자 어선에 대한 승선검색제도 수립: 1) 타 체약당사자 소속 검색관 참여 가능, 2) 안전상 필요 또는 직무수행 방해시 무력 사용 가능

| CPC                          | 주요 의견   |
|------------------------------|---|
| 우루과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MM 회의에서 합의 없었음에도 IMM 문서로 제출되어서는 안됨</li> <li>· IUU는 소비지에서 많이 확인되므로 항구단계에서 통제 필요</li> </ul> |
| 과테말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 필요. 채택된 후에 통일된 시스템 수립을 기대하기는 어려움</li> </ul>                           |
| 튀니지,<br>이집트,<br>알제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력사용 조항 삭제 또는 수정 원함</li> </ul>   |
| EU, 미국,<br>영국,<br>캐나다,<br>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서 지지. 본 제도가 수립되어야 IUU 확인 가능</li> <li>· CPC들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한 조항들이 있음</li> </ul>              |

- 개도국들의 반대로 제안서 미채택되고, 승선검색제도 이행 지원 작업반 수립 제안서(EU)도 미채택

#### ○ 어획증명제도(CDS) 상설작업반 수립에 관한 권고 제정

- 일본은 CDS 작업반 회의 결과로, ICCAT 관리어종들에 대한 CDS 확장 및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작업반 수립 제안서를 제출

- EU는 너무 많은 작업반 수립으로 인한 부담을 제기, eBCD 기술작업반과의 통합을 제안하였고 동 제안이 수용되어 제안서 채택됨

#### ○ IUU 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에 관한 권고(18-09) 개정

- 18-09 29항에는 입항하는 외국어선의 양륙 또는 전재에 대해 최소 5%를 검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는 CPC가 일부에 불과하여 동 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운 상황
- 자국 항구에서 ICCAT 어종을 양륙 또는 전재하는 외국어선의 양륙 및 전재 건수, 입항거부 건수 및 사유, 선박에 대한 검색 정보를 제출하도록 권고를 개정함(매년 9.15까지 전년 1.1~12.31 활동에 대해 보고)
- 또한, 검색 수행으로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CPC 당국은 검색 완료 후 14일 이내 사무국에 검색보고서를 전달해야 하고, 14일 이내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동 기한 내 사유를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함

#### ○ 근로기준 핵심원칙에 관한 결의 제정

- 선원 건강, 안전,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비구속적인 결의\* 채택

#### 【 결의 주요 내용 】

- 1) ILO, IMO 등 관련 기구들의 도구 비준
  - 2) 국내법령에 선원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기준 수립
  - 3) 항구검색 중 근로관계 권리 위반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조치
  - 4) 선원 실종, 사망, 중상의 경우를 위한 비상행동계획(EAP)을 수립하여 시행
  - 5) CPC들은 연례보고서에서 EAP를 포함하여, 본 결의 이행에 대해 보고
  - 6) 개발된 CPC들은 개발도상CPC들의 본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해 노력
  - 7) 채택 3년 후, CPC 이행보고서 및 관련 국제표준들을 고려하여 본 결의 검토
- 중국은 본 주제는 수산당국이 완전히 관할할 수 없고 ICCAT 어업 관련 부분만 관할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일본은 향후 본 결의가 구속적인 조치로 제안될 경우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

## ○ IUU 선박 목록

- 충분한 후속조치로 *HALIFAX*(나미바아)와 *HALELUYA*(콜롬비아)는 목록에서 삭제. *ISRARI*~3(오만)은 공식 삭제 요청 부재로 등재 유지
- EU는 *DEMERSAL* 9(앙골라)의 무등록 조업을 이유로 등재를 요청. 앙골라는 행정착오임을 소명,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삭제하기로 합의

2023 ICCAT IUU 선박 목록 교차 등재 현황

| 9개 RFMO* | 신규 등재 | 목록 삭제 | 타기구로부터 정보 변경 | 정보 미변경 | 현재 등재 척수 |
|----------|-------|-------|--------------|--------|----------|
| 합계       | 12**  | 0     | 17           | 123    | 152      |

\* CCAMLR, CCSBT, GFCM, IOTC, IATTC, NAFO, NEAFC, SEAFO, WCPFC

\*\* IOTC 교차등재

## 6. 재정위원회

### ○ 개도국 회의 참석 기금 절차규칙 개정

- 7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규정으로 인해 1분기 과학회의 일정 수립 어려움으로 기한을 45일로 개정

### ○ '24년~'25년 위원회 예산 및 분담금

| 구분     | 2024년                               |            | 2025년(잠정)                           |         |
|--------|-------------------------------------|------------|-------------------------------------|---------|
|        | 금액                                  | 전년비        | 금액                                  | 전년비     |
| 위원회 예산 | EUR 5,806,790.36<br>(약 82억 3,501만원) | + 3.72%    | EUR 6,234,975.12<br>(약 88억 4,225만원) | + 7.37% |
| 한국 분담금 | EUR 159,240.95<br>(약 2억 2,583만원)    | + 485.39%* | EUR 170,761.63<br>(약 2억 4,216만원)    | + 7.23% |

\* 급격한 인상 원인: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 변경(개도국 → 선진국)

- EU는 '25년 예산 증가가 과도함을 제기하고, 특히 동 예산이 향후 예산 인상의 토대로 작용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여, '25년 예산은 잠정안으로만 제시되고 '24년 연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 7. 총회

### ○ BBNJ, CBD 협약 대응

- 최근 타결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들에 대한 ICCAT 대응을 논의함

| 구분   | 주요 의견  |
|------|--|
| 과테말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NJ는 해양법협약을 변경시키지 않음. 공해 어업 관리는 RFMO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li> <li>· BBNJ와 협력해야 하고 관여하는 것은 기구 본래 임무 안에 포함되므로 별도 결의 불필요</li> </ul>              |
| 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RFMO들과 공통의 어려움을 확인하여 공동 대응 필요</li> </ul>   |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D는 구속력 없는 정치적 결정이고 BBNJ는 아직 미발효임</li> <li>· 다른 RFMO들과 소통하여 적극 대응 필요</li> </ul>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NJ는 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임. ICCAT이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모색 필요</li> <li>· 협정이 발효할 때까지 우리의 과학, 관리절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검토 필요</li> </ul>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RFMO들과 공조하여 적극 관여 필요</li> <li>· BBNJ는 매우 새로운 협정으로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주의 환기 필요</li> <li>· RFMO로서 협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연구 필요</li> </ul>              |
| 사무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이 관련 회의에서 전달할 수 있는 ICCAT 입장 정리 필요</li> <li>· BBNJ 회의에 각국 어업전문가 참여 필요</li> </ul>  |

- CPC들은 전반적으로 이들 도구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이 필요함을 표명하였고 생물다양성 보존 도구 이행에 관한 ICCAT 결의\*를 채택함

#### 【 결의 주요 내용 】

- 1) 회원국들은 이들 도구들의 이행에서 ICCAT 어업이 고려되고 관련 논의에 위원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 2) 도구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다른 RFMO들과 협업을 촉진
- 3) 사무국은 과학위와 협업하여 도구들의 이행에 있어서 위원회 전문성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4) 생물다양성 보존과 책임있는 어업이 양립가능한 사례들을 조사
- 5) CPC, 과학위, 사무국은 위 사항들의 경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2024년부터 위원회와 과학위 상설의제로 논의

○ 기후변화 전문가 공동그룹 후속 작업에 관한 결의 채택

- 금년 개최된 기후변화 작업반 회의(7.11~12) 결과를 토대로 이후 ICCAT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결의를 채택

【 결의 주요 내용 】

- 1) 회의 의제: 기후변화 관련 우선순위 작업,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ICCAT 과학 작업 및 관리조치에서의 활용 방안, ICCAT 기후변화 행동계획안 마련 등
- 2) 회의 전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기후변화 작업 현황 문서('stock take' review) 준비
- 3) 기후변화 영향 분석, 저감 방안 모색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 방안 논의
- 4) '24년 연례회의에서 행동계획안 등 전문가 공동회의 결과 검토 후 후속조치 논의

○ 기타 논의

- 차기 의장단 구성: 기존 의장국들이 계속 수행하기로 함

\* 총회(EU), 제1부의장(모로코), 제2부의장(퀴라소), 재정위(미국), 이행위(미국), 상설작업반(EU), 패널1(가나), 패널2(일본), 패널3(남아공), 패널4(알제리)

- 의장 선출 방식에 관해 회기간 작업반 및 내년 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 2024년 ICCAT 주요 회의일정

| 일자          | 회의명                   | 방식(장소)       |
|-------------|-----------------------|--------------|
| 3.4         | 어획증명제도 상설작업반 회의(1차)   | 하이브리드(스페인)   |
| 3.5~3.8     | 패널2 회기간 회의            | 하이브리드(스페인)   |
| 5.9         | 지속가능한 재정 작업반 회의(1차)   | 화상회의         |
| 5.22~5.24   | 패널1 회기간 회의(2차)        | 하이브리드(브라질)   |
| 6.4         | 회의 절차규칙 검토 작업반 회의(1차) | 화상회의         |
| 6.10        | 전자감시시스템 작업반 회의        | 하이브리드(미정)    |
| 6.11        | 어획증명제도 상설작업반 회의(2차)   | 하이브리드(미정)    |
| 6.12~14     | 제17차 통합감시조치 작업반 회의    | 하이브리드(미정)    |
| 6.25~6.26   | 패널4 북방황새치 관리전략평가 회의   | 화상회의         |
| 7.2~7.3     | 기후변화 전문가 공동회의         | 화상회의         |
| 7.15        | 지속가능한 재정 작업반 회의(2차)   | 화상회의         |
| 9.10        | 회의 절차규칙 검토 작업반 회의(2차) | 화상회의         |
| 9.23~9.27   | 과학위원회 회의              | 하이브리드(스페인)   |
| 11.9~11.10  | 패널1 회기간 회의(3차)        | 하이브리드(사이프러스) |
| 11.11~11.18 | 제24차 특별회의             | 하이브리드(사이프러스) |